상자부 전형적인“ 복지부동"

정부정책 부재 틈타 NCC 폴리머가격 기습인상“ 강행"

NCC기업의 폴리머 가격인상 시도가 상공자원부의 입김으로 무산된 이후 최근 또다시 PVC를 중심으로 기습적인 가격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5%감산」을 근거로한 폴리머 가격인상 방침이 상공자원부의 제재지침으로 철회된 듯 했으나 5월 들어 PVC사출 분야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합성수지가 잇달아 인상되는 등 정부방침이「제재」쪽에서「눈감아 주기」쪽으로 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짙게하고 있다.
실제로 럭키,한양화학, 삼성, 현대 등 대부분의 NCC기업들은 정부의 인상 규제방침과는 달리 지난4월 26일 이후 계속된 가격인상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가운데 럭키,한양화학은 PVC가공업체를 상대로 기존 톤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7.7%인상 했다.
또 PP의 경우도 현대석유화학이 5월1일자로 기존 톤당 50만원에서 2만원 인상 했으며 삼성종합화학은 다소의 시차를 두고 오는 5월 중순께 같은 폭의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우기 한양화학과 럭키는 6월초 까지 한차례 더 인상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최소 10%이상(톤당 4~5만원)의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합성수지 가공 기업들은『당초 감산합의에따른 가격인상 문제가 담합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생산기업들이 이제는 시차를 두고 단계별인상을 하고 있다』며 경영난 가중을 들어 불만을 나타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상공자원부는 NCC기업의 가격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데도 이들 행위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유보하는 등 상당부분 NCC기업의 인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뚜렷한 원료가 인상요인이 발생치 않고 있는데다 지난 1월 합의한 5%감산안 자체도 이미 현실성이 결여돼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방침 마저 무시된 폴리머가격 인상움직임은 정부 정책상의 집행력에 상당한 흠집으로 작용하게 됐으며 산업자율화 시책추진에 있어서 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폴리머가격인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도「담합이냐」「정상적인 기업의 자구책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등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관련산업의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화학저널 1994/5/30>